

행정 합쳤지만 갈등 여전... 생활 통합도 갈 길 멀다

전남광주 통합 100일 <하> 지역 갈등과 생활권 통합 과제

청사 배치·의대 선정 권역별 충돌...군공항 이전 절차 남아
광주 자치구 권한 확대 요구...산업 투자 집중 우려도 제기
교통·의료·복지 기준 조정 과제...지역 간 이해 조정 시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지역 간 갈등과 시민 생활의 제도 차이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청사 기능 배치와 국립 의대 선정을 놓고 권역별 반발이 이어졌고, 군공항 이전도 주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통·의료·복지 분야에는 옛 전남과 광주의 기준이 유지되면서 행정 통합을 생활 속 변화로 이어가는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갈등이 가장 먼저 드러난 사안은 조직개편이었다. 광주·무안·순천의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기조에도 기획·예산·인사 등 주요 기능의 배치를 놓고 지역별 요구가 충돌했다.

광주와 전남 공무원들은 청사에서 결의

대회를 열었고, 동·서부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나섰다. 광주청사 앞에는 근조 화환까지 놓였다. 통합 이전 주청사 위치를 둘러싸던 논쟁이 출범 이후에는 핵심 부서 배치를 놓고 이어졌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특정 지역에 기능이 집중되거나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았다. 세 청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행정 효율과 지역 균형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국립 의대 신설에서는 전남 동·서부권이 맞섰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후보 대학에 합의하지 못하자 통합시는 개별 평가를 통해 순천대를 선정했다. 그러나 서남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보 선정 이후에도 지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통합시는 서남권에 대학병원급 의료 기

반을 확충해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보안을 내놓았다. 의대 설립 절차와 함께 서남권 의료 수요에 대응할 후속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 규모와 진료 기능,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되는 단계까지 나아갔지만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 지원과 이전 지역 자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맞물려 군공항 이전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이전 지역 주민의 부담과 자원 문제는 여전히 협의 대상이다. 광주와 무안이 같은 지방정부에 속하게 된 만큼 통합시가 양쪽의 요구를 조정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 권한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옛 전남 22개 시·군보다 권한이 적다며 자치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광주라는 단일 도시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효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는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이 들어서는 계획과 맞물려 전남에서는 기업과 인구가 광주로 쏠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시는 광주의 산업 기반과 전남의 전력·용수 등을 함께 활용하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생산시설 유치 효과를 연관 산업과 일자리로 넓혀 지역 내 균형 성장으로 이어가는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피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권역별 이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의 통합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교통·의료·복지 분야에 있어 전남과 광주가 각각 운영하던 기준이 남아 같은 특별시 시민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적용받는 제도가 다르다.

제도를 조정할 때는 기존 혜택의 축소 여부와 추가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어느 기준에 맞출지에 따라 수혜 대상과 필요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역 간 차이를 줄이는 방향과 시행 시기를 정하는 일이 생활 통합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통합시는 새 조직 가동 이후 의대 선정에 따른 서남권 의료 보원책과 군공항 이전 지원, 기초지자체 권한 조정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초소형군집위성 '네온넷'(NEONSAT) 5기를 포함해 총 15기의 위성을 싣고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섰다. 사진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흥서 쏜 누리호 '4연속 성공' 순천 조립·고흥 발사 시대 연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투입하며 4회 연속 발사에 성공했다. ▶관련기사 3면

내년 6차 발사부터는 순천에서 발사체 단 조립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순천의 제작·조립과 고흥의 발사를 잇는 전남 우주산업 기반도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누리호는 7일 낮 12시 25분 나로우주센터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싣고 이륙했

다. 주탑제 위성인 군집위성 5기는 모두 목표 궤도에 투입됐으며, 부탑제 큐브위성은 10기 중 9기가 분리됐다.

이번 성공으로 누리호는 2021년 첫 발사 실패 이후 2~5차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발사 성공률을 80%로 높였다.

국내에서 초소형 위성 5기를 한 차례 발사로 우주에 투입한 것은 처음으로, 여러 위성을 운반하는 능력과 발사 신뢰성을 함께 입증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이개호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험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국감 핫이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천)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멸위험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8면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어 소멸위험을 감안해 기초단치단체별 국고보조율의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최소 55%~70% 차등 상향,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재정자립도·소멸위험 따라 국고보조율 55~70% 차등화 제안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평균 10.3%...38곳은 한 자릿수 불과

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대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18개 군을 추가 확대하고, 국비보조율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38개 군(55.1%)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

(10% 미만)로 국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은 전남이 16개 중 11개 군, 경북·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 군, 전북은 7개 전체가 해당된다.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도 20% 초반에 머물러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도 지방비 매칭에 곤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맞서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소멸위기가 깊은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



다”면서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55·60·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남일보·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10.12(월)~11.16(월)

해피니스CC(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회일정 예선 : 2026.10.12~11.09(매주 월요일) 07:00 티업
본선 : 2026.11.16(월) 07:20 티업

경기방식 신데리오 방식
대중제코스(하트, 히든, 힐링), 18홀 샷건
남성(화이트티), 여성(레이디티)

참가대상 만 20세 이상 남·여 순수 아마추어 골퍼

참가접수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참가비 30,000원 / 본선 : 50,000원
(중식+출입원 보험료 포함)/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

임장료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
(단, 본선은 5일 전 까지 가능)

납부방법 접수 후 참가비 입금
(광주은행 001-127-012075,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입장료는 현장 결제

문의 예약실 061)330-5001~4
경기팀 061)330-5021~2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